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0.28(금) ~ 2022.11.03(목)

제공일시 2022 11 1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0.28(금) ~ 2022.11.03(목)

제공일시 2022 11 1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독일, '심해채굴' 주의 중단 요구

- 배터리 부족이 심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심해 채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독일 뉴질랜드, 프랑스는 함께 환경영향에 대한 추가연구가 이뤄질 때까지 해저채굴 탐사 중단을 주장했음
- 폭스바겐, BMW는 해저 채굴 금속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현재 아프리카 자메이카에서는 유엔의 국제해저기구(ISA)의 심해채굴규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독일의 반대로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됨
- 독일의 연방지질자연자원연구소(BGR)은 2006년부터 북태평양 지역 해저에 망간이 풍부한 심해 채굴 탐사 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당초 15년이었으나 지난해 계약은 5년 더 연장됐음

(Reuters, 2022.11.01) Helen Reid 기자

2. 미, 친환경 포장으로의 대세 전환 가속화

- 미국은 현재 지속가능한 포장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군사체, 식품 폐기물, 해산물 등을 활용한 대체 플라스틱 연구가 활발함
- 지속 가능한 포장 관련 VC 투자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8억344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거래 건수로는 전년대비 58.2% 증가한 87건을 기록했음
- 2022년에만 뉴욕, 워싱턴, 뉴저지 등 16개 주가 포괄적 생산자 책임제(EPR) 법안을 도입했음
- 캘리포니아는 2032년까지 역내 모든 포장이 재활용 또는 퇴비화가 가능해야 하며, 플라스틱 포장 생산량을 25% 줄이고 사용 후 포장의 65%를 재활용하도록하여 포장 산업계의 친환경 포장으로의 움직임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코트라해외시장뉴스, 2022.11.02)
달라스 무역관 이성은 기자

3. "10년 뒤 폐모듈 쓰레기 '대란' 온다"... 고장난 태양광 모으는 獨기업

- 5년 뒤 기대수명을 다 한 태양광 폐패널(폐모듈)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플라스틱, 폐배터리에서처럼 태양광 자원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음
- 국내에서는 재사용까지 아우를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반면,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을 국내에 도입하기에 시기상조란 의견도 맞서
- 한편 유리, 목재, 페트(PET)를 넘어 태양광 폐모듈을 건축 단열재로 재활용하는 독일 기업 '라일링(Reiling)'의 사업 모델이 태양광 폐패널 처리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머니투데이, 2022.10.31) 김훈남, 김성은 기자

1. 딜로이트 보고서, 요즘 기업 경영진의 최고 관심사는 그린워싱

- 딜로이트(Deloitte)가 기업 임원 700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리더들의 관점에서 기후 행동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기업 경영진의 관점에서 기후 행동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보고서(2022 Climate Check)로 펴냈음
- 조사 결과, 기업 임원들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행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이익에 대해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탄소배출을 줄임으로써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음
- 특히, 그린워싱은 경영진의 3분의 2가 해당 산업에서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답했고, COP27에 참석하는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그린워싱'이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 위험 최소화', '새로운 규정 및 정책 구현'을 제치고 1위로 꼽힘

(임팩트온, 2022.10.28) 홍명표 기자

2. 맥킨지, 건설 환경 탈탄소대책협의회 발족

- 맥킨지가 건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솔루션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계 선두기업들로 구성된 연합인 '넷제로 빌드 환경위원회(Net Zero Build Environment Council)'를 출범했다고 밝혔음
- 건물과 부동산은 전 세계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데, 맥킨지는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그린시멘트, 수소보일러 등 혁신을 위한 자금조달, 협업과 파트너십을 돕겠다고 밝혔음
- 맥킨지는 협의회 출범과 함께 보고서를 통해, 많은 기술개발이 이뤄져있음에도 건설 환경 생태계 내의 협업이 부족한 것을 주요 장애물로 지적했음

(ESGToday, 2022.11.03) Mark Segal 기자

(보고서)

3. 암모니아 선점루트 뚫어라... 글로벌 기업 '파트너' 찾는중 [헤럴드 뷰]

- 한국에서는 탄소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기 어려운 만큼, 학계와 업계에서는 암모니아를 활용해 수소를 운반·분해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암모니아가 기후변화 기술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음
- 암모니아는 2050년까지 수소 운반체, 연료, 발전원 등으로 쓰여 사용량이 약 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덴마크의 베스타스, 영국의 에니우스 에너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암모니아 생산에 뛰어들고 있음
- 국내에서는 롯데정밀화학, 고려아연, 한화임팩트,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국내 암모니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음

(헤럴드경제, 2022.11.02) 주소현 기자

1.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 결성… “2030년 점유율 40%, 최강국 도약”

- 2030년까지 이차전지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민관 협의 플랫폼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출범함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은 203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40% 달성을 목표로, 국내에 50조원 이상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산업경쟁력 ▲공급망 ▲배터리 분과를 운영함 산업경쟁력 분과에서는 최첨단 생산기지를 국내에 조성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 4680 원통형 배터리 공장 신축을 앞두고 있고, 삼성SDI도 내년 전고체 파일럿(PILOT) 라인을 구축함
- 이에 더해 1조원 규모 투자펀드 출시하여 ‘배터리아카데미’ 양성, 공급망 분과의 ‘코리아팀’ 구성, 배터리 규범 분과의 전주기 이력정보 관리 DB구축(2024년까지) 등을 실시함

(전자신문, 2022.11.01) 김영호 기자

(ZONET코리아, 2022.11.01) 이한열 기자

2. 정부 “연내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 발표”

- 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고 올해 안에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달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주요 탄소중립 정책목표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정책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12개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위원 8명으로 꾸려졌음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배출권 거래제 진단과 개선과제’를 발제하면서, 감축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음
- 민간위원들은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체계 정비 등의 기반 강화,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 지원책 마련 등을 제시했음

(연합뉴스, 2022.11.01) 박원희 기자

(MBC news, 2022.11.01) 김아영 기자

3. 탄소중립 정책 지원할 범정부 싱크탱크 만든다

- 정부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을 지원할 범정부 싱크탱크인 ‘탄소중립 종합 싱크탱크(가칭)’를 출범함
- ‘탄소중립 종합 싱크탱크’는 탄중위의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을 지원하는 독립기구 형태로 출범되어 각 부처 탄소중립 지원 기능을 통합해 탄중위 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임
- 탄중위는 구체적인 정책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음
- 이를 토양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과 무탄소 신(新)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 믹스(mix)를 구성하기로 했음

(조선비즈, 2022.11.03) 송기영 기자

1. 정의선·신동빈 ‘전기차 동맹’... 충전 인프라에 3000억 투자

-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이 이르면 이달 중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스트럭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서울경제, 2022.11.02) 김기혁 기자
- 이번 계약에는 KB자산운용도 참여함 이들 3사는 신설하는 합작법인에 총 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국내 충전 인프라 확대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됨
- 3사는 SPC를 통해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를 충전 사업자에 임대하는 새로운 인프라 사업 모델을 개발하며 2025년까지 전국 주요 도심에 초고속 충전기 5000기가 설치될 예정임
- 특히 롯데가 인수한 전기차 충전기 제조 기업 중앙제어는 충전기 공급의 핵심 사업자로 참여함

2. SEMI, 반도체 기후 컨소시엄 설립... 삼성·SK하이닉스 동참

-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 60여 곳과 함께 ‘반도체 기후 컨소시엄’을 설립했음 (아이뉴스24, 2022.11.02) 민혜정 기자
- 반도체 기후 컨소시엄은 반도체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협회임 파리협정 지지를 바탕으로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기후 변화를 주도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협력할 예정임
- 반도체 기후 컨소시엄은 오는 8~19일 열리는 제27차 유엔(UN) 기후정상회의(COP27)에서 출범을 정식으로 알릴 방침임
- 아짓 마노차 SEMI 최고경영자(CEO)는 탈탄소화를 위해 업계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기후 컨소시엄에 가입해 탈탄소화 움직임에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3. 재활용 폴리카보네이트를 전자제품 외장 원료로... ‘완벽 선순환’ 첫발

- 각 국가나 기업들이 도전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LG그룹이 친환경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음 (문화일보, 2022.11.01) 이승주 기자
- LG화학은 소비가 끝난 페플라스틱을 회수 후 재가공한 PC인 ‘사용 후 폐기물 재활용(Post Consumer Recycle-PCR) PC’ 연구에 집중하고 있음
- PCF PC는 최근 미국의 친환경 인증인 ‘EPEAT(Electronic Product Environmental Assessment Tool)’을 획득하기 위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넘어 자동차, 산업재 시장에서도 활용 문의가 증가하고 있음
- LG화학은 이를 통해 플라스틱 원료 제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완벽한 자원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음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10.28(금) ~ 2022.11.03(목)

제공일시 2022.11.1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398.7675

EU, 포장·폐수처리 지침에 이어 CCUS 전략 비전 발표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업계를 타깃으로 한 포장 지침을 이번 달 말 발표할 예정임. 코로나19 이후 집으로 택배를 배송받아보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덩달아 포장 폐기물이 증가한 탓임
- EU 집행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Reducing packaging waste directive)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힘. 규제 초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자상거래 업체는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2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2040년에는 그 비율이 80%로 높아짐
- EU 개정안의 핵심은 포장의 최소화임. 택배 상자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포장된 제품을 배송할 때 '빈 공간'을 보장해야 함. 택배 상자에서 물건을 제외한 빈 공간은 물건의 안전을 위해 종종 폴리스티렌, 에어쿠션, 종이 또는 에어 캡 등으로 채워짐. 집행위원회는 이 빈 공간의 비율을 최대 40% 남겨놔야 한다고 규정함
- 또, 제품 부피가 크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이중 벽이나 가짜 바닥, 기타 수단으로 포장하거나 포장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분의 포장을 사용해선 안됨. 전자상거래 업체는 평균적으로 25%의 빈 공간을 포장재로 채우는데, 집행위원회는 이런 관행이 배송 안전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포장이라는 점을 짚음
- 전자상거래를 겨냥한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이 업계가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임. 2021년 유럽 전자상거래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13% 상승한 7180억유로(약 998조원)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으로 운영되는 상점이 문을 닫으면서 급격히 성장함
- 집행위원회는 2020년 조사한 법안 예비 비용 편익 분석 보고서에서 “소매업체에서 대규모 전자상거래 업체로 이동이 증가했고, 온라인 판매가 증가했으며, 택배 배송과 같은 새로운 소비 습관에 의해 포장 폐기물이 수십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자상거래를 특정한 이유를 밝힘
- 이어, 택배 배송 등에서 빈 공간을 의무적으로 남겨둬야 할 뿐 아니라, 자체 포장만으로도 배송이 가능한 제품일 경우엔 '옵션 아웃'이라는 옵션을 제공해 소비자가 포장을 거부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함
- 지난달 26일(현지시각) EU가 발표한 '2050 공해 제로(Zero Pollution)' 계획을 둘러싸고 제약회사와 화장품업체에 미칠 영향에 관한 논의가 분주히 이어지고 있음. 방수와 얼룩제거, 내열성 등을 위해 제품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PFAS(과불화화합물), 플라스틱 포장제품에 많이 쓰이는 비스페놀A, 대표적인 해열소염진통제인 이부프로펜까지 폐수처리를 위한 25개 유해물질에 포함됐기 때문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번에 제안한 개정안은 두 가지로, EU 대기질 법안(EU ambient air quality legislation)과 도심 수질처리 규칙(Urban Wastewater Treatment Directive)의 개정안이 이에 해당됨
- EU 집행위는 주요 대기오염 물질인 초미세먼지의 연간 한도를 현재의 25 $\mu\text{g}/\text{m}^3$ 에서 2030년까지 10 $\mu\text{g}/\text{m}^3$ 로 낮추겠다고 밝힘. 초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줄여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준인 5 $\mu\text{g}/\text{m}^3$ 에 근접하겠다는 목표임. 특히, 수질오염에 관해서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확실히 함.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 폐수에서 발견되는 독성 미세오염물질의 92%가 의약품과 화장품에서 나옴

(인팩트는, 2022.11.08) 박지영 기자

(인팩트는, 2022.11.04) 홍명표 기자

(인팩트는, 2022.11.02) 박란희 편집장

- 우선, 대기오염의 경우 초미세먼지의 한도를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음. 특히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과 피해보상 규정을 만든 것이 중요하다고 유랙티브 등 현지언론은 밝히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오염만으로도 매년 30만명에 가까운 유럽인들이 조기사망한다”며 “새로운 규칙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침보다 한참 높은 주요 오염물질로 인한 사망을 10년 안에 75%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2030년 EU 대기질 기준을 WHO 가이드라인과 더 가깝게 설정하고, 2050년에는 대기오염 제로화를 이루겠다는 것임. 현재의 $25\mu\text{g}/\text{m}^3$ 인 초미세먼지 기준을 2030년까지 $10\mu\text{g}/\text{m}^3$ 로 낮춤
- 한편, EU는 이밖에 폐수를 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슬러지(하수 정화 후 남는 찌꺼기) 품질 개선, 폐수에서 영양분을 회수할 의무, 미세공해물질에 대한 새로운 표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새로운 모니터링 요건 등을 법안에 담음. 이뿐 아니라 폐수 처리 의무는 1000명(현재 2000명)의 소규모 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됨
- 또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관리를 돕기 위해 대도시에 통합된 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폐수에서 주요한 항균내성을 포함한 바이러스들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제안함
- 집행위원회는 “폐수 부문은 바이오가스 등 미개발 재생에너지 생산 잠재력이 상당히 때문에 EU 각국은 자원 손실을 피하기 위해 슬러지와 처리된 폐수의 재사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 오염을 원천적으로 추적해야 한다”고 밝힘. 예를 들어 슬러지로부터 ‘인산’을 회수하는 규칙을 만들어 비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식임. 이번 규칙은 유럽연합과 회원국간 논의를 거쳐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규칙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에게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에 탄소포집·활용·저장(이하 CCUS) 기술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유랙티브(Euractiv)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보도함
-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과학자들은 세계가 재앙적인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려면 탄소 포집과 함께 감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함
- 클린 에어 태스크 포스는 보고서에서 유럽 전역에 탄소 관리 기술을 배치하려는 노력은 이미 현저하게 성장했으나, 대규모 배치 노력은 불충분한 규제 인센티브와 이산화탄소 인프라 개발 필요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함
- 보고서는 현재 유럽 전체에서 50개 이상의 탄소 포집 또는 저장 프로젝트가 제안되는 상황에서, EU와 각국 정부는 공동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함. 아울러, 탄소 포집, 제거, 운송 및 저장 기술은 경제 전반에 걸친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구이지만, EU의 현재 정책 로드맵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 맺음